

실내 마스크 해제 앞당기나... 변수는 '겨울 유행 안정화'

정부 '유행 안정되면 내년 봄 해제' 시그널 대전·충남 독자 해제 추진으로 논의 급물살 15일 공개토론회서 논의... "로드맵 제시해야"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정부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뉴시스 취재 결과,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도 자체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전남은 정부 방침을 따르되, 마스크 해제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입장을 정리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개 요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의 이같은 독자 행동에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봄'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으로 언급해 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월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했고 정기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9일 7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

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제조건을 말했다.

겨울철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재 7차 유행은 2주 넘게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기에 들어섰다. 최근 1주간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만3072명으로 전주 대비 930명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팀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시차를 두고 증가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정책 완화는 유행이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에는 이뤄지기 어렵지만 7차 대유행도 완만해지는 시점은 이런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자체 주도의 정책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가 남아있어야 하는 범위를 결정해



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다뤄지면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 무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이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 지적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유행 예측

이 어려운 시기다. 확진자가 아주 천천히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며 "통상적으로 12-2월은 호흡기 감염병과 심혈관계 환자 발생으로 중환자실이 항상 모자라다. 이런 의료 대응 관련 토론회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지하철역 서점, 36년만에 역사 속으로 6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위치한 한우리문고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 내 서점들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이달 9일 만료된다. 1986년 지하철 내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첫 선을 보인 지하철 서점은 이번 결정으로 36년 역사를 뒤로 한 채 사라지게 됐다.

최태원·노소영 34년 만에 이혼...소송 5년만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14일부터 2022년 12월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1%로 각 비율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법원은 이번 소송에 쓰인 비용은 양측이 합해 각각 부담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당초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최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의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 만에 난 결론이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